

현대차·LG 등 AI 자율제조 기술 도입... 민관 투자액 2.5조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
산업부, 153개 기업·기관 참여

2028년까지 200개 사업 발굴·추진
올해 추진 프로젝트 오는 9월 확정
선도 프로젝트 과제당 100억 지원

현대차와 LG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 제조공정에 AI(인공지능) 자율제조 기술이 도입된다. 관련 민관 투자액은 2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올해 중 3000억원 규모 관련 대형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하고, 5년간 10조 원 규모 금융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과 산학연을 대표하는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에는 국내 주요 제조기업 등 12개 업종 153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 제조업에 AI를 도입해 생산성·안정성·환경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힘을 모은다. 참여 기업 매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액을 합산하면 국내 제조업 전체의 40%에 육박한다. 얼라이언스는 업종별 12개 분과로 구성, 각 분과 대표 앵커기업과 함께 핵심 공급망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이 참여한다.

참여기업 수로는 대기업 21%,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56%이다. 생기연·전자연·한자연 등 전문 연구기관들

도 분과별 간사를 맡아 얼라이언스 활동 전반을 밀착 지원한다.

얼라이언스는 올해 10개 이상의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200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난달 완료된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에서 10개 과제에 총 213개 수요가 접수돼 2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산업계 참여 의지가 확인된 만큼, 산업부는 올해 추진할 사업의 개수를 당초 10개에서 20개 내외로 확대를 검토 중이다. 20여개 프로젝트에 대한 민·관의 AI 자율제조 투자액은 2조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추진되는 프로젝트는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9월 최종 확정된다.

얼라이언스는 아울러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한 기술,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표준모델도 만들어 2028년까지 100개 이상 사업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현대차, LG전자, DN솔루션즈, 포스코, 에코프로, GS칼텍스, KAI, HD한국조선해양 등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업종 내 AI 자율제조 확산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현대차는 생산준비 단축과 생산속도·품질 향상을 목표로 고객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제품을 빠르게 제공하는 민첩하고 똑똑한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SDF, Software Defined Factory)'을 구축한다. LG전자는 축적된 자율제조 분야 노하우와 기술을 기반으로

협력사와 중소기업들에게 경쟁력 있는 자율제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자체 개발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해 업계 전체 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선도 프로젝트에는 과제당 최대 1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AI 자율제조 확산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중 3000억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할 계획이다. 여기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참여 기업들의 AI 자율제조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5년간 10조원의 금융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을 통해 현재 5% 수준인 제조 현장의 AI 자율제조 도입률을 2030년까지 40% 이상까지 끌어올려, 제조 생산성은 20% 이상, GDP는 3% 이상 높인다는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제조 현장의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얼라이언스를 통해 대한민국 제조업 혁신의 대전환점을 마련하겠다. 정부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체코, 인력양성 등 전략적 협력 강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계기
尹 대통령, 체코 특사파견 검토 지시

정부가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체코에 특사도 파견될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오후 이반 안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면담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사의를 표명하고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관계부처에 체코에 특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고 정해진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체코 특사 파견을 검토 중이다.

체코 정부는 지난 17일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인 신규원전 사업에서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로, 원전 본산지인 유럽 원전 시장 진출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

면담에서 안 장관은 "체코 정부의 공정한 입찰 진행과 합리적인 평가로 한국 원전 산업의 우수성이 다시금 전세계에 알려지게 됐다"며 "양국 수교 이후 34년간 쌓아온 신뢰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기술개발, 제3국 공동진출,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등 원전 전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양국은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관계가 격상된 이후 교역이 지속 확대

됐고 지난해 교역액은 44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안 장관은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원전을 포함해 첨단산업·기술, 교통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심화 확대해 나감으로써, 그동안 긴밀했던 양국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파트너십으로 발전해나가기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양국 정부가 신규원전 사업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현안을 수시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원전 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 외연을 포괄적·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는 대한상의, 한경협,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중견연, 경총 등 6대 경제단체도 참석, 양국의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고온·장마에 채소값 '굉충'

장마가 시작된 뒤 일부 농가의 침수 피해로 상추와 수박 등 채소와 과채류 가격이 올랐다. 적상추 100g 가격이 1주일 만에 56.3% 뛰어 한 달 전보다 2배 넘게 올랐다. 깻잎과 시금치, 풋고추 등도 모두 1주일 만에 10% 이상 올랐고, 수박과 참외, 토마토 등 여름철 대표 과채류도 출몰이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2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 상추 등 일채소류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

가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 국내 최대 에너지저장장치 건설

경남 밀양서 336MW 용량 첫 가압

한국전력이 국내 최대인 336MW(메가와트) 용량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건설하면서 전력계통 안정을 통한 미래 전력 설비 선도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은 지난 19일 경남 밀양에 자리잡은 나노산단 내 북북변전소에서 336MW 용량의 ESS를 최초로 가압했다고 22일 밝혔다. ESS란 생산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송전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해당 작업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6개 변전소(영주·함양·예산·영천·신남원·부북)에서 시행된 총용량 978MW ESS 건설 사업 중 마지막 가압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용량이다.

이번 사업은 준비부터 설비개선 및 최종 가압까지 모든 과정을 국내 ESS 대표기업 및 유관기관과 함께 수행해 국가 미래 성장에 기여한 모범적인 사업

사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화재 예방 대책 마련 등 ESS 설비 개선에 앞장서 기술 향상을 견인했고, 공정화와 현장실명회를 활용한 대내·외 다각적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한전은 이번 가압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탄소 전원연계에 기여할 수 있고, 최대 1GW(기가와트)의 발전 제약 완화가 가능해 전력공급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전은 제10차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라 향후 5개 변전소(소룡·농공·나주·선산·신영주) 300MW ESS 구축 추진 등 전력 계통 안정화와 ESS 산업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ESS와 같은 신사업·신기술 역량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이바지하겠다"면서 "안전적 전력공급이라는 본연의 임무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전국민에 일률적 25만원 지원, 미봉책"

최상목 경제부총리, 반대 의사 표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22일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25만 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4월 총선 공약인 민생위 기극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출이 호전되고 있지만 내수 경제와 민생 여건은 어렵기 때

문에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 처리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미봉책이라고 말하는 첫째 이유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국민 개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성격이 다르다"며 "일회성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은 생계비를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 5년간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은 생계비를 보전해줬고,



소상공인은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조정 등 구조적인 문제를 호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이 통과될 경우 최소 13조 원에서 최대 18조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